

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

2012. 3



사단
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OREA MEDIUM INDUSTRIES ASSOCIATION

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

2012. 3



사단
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OREA MEDIUM INDUSTRIES ASSOCIATION

Contents

| | |
|--------------------------------|----|
| 요 약 | 1 |
| 1. 문제제기 | 3 |
| 2. 중견기업의 정의 및 범위 | 5 |
| 3.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 | 8 |
| (1) 중소기업 관련 조세 지원 | 8 |
| (2)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 14 |
| 4. 개선방안 | 19 |
| 참고문헌 | 22 |

* KOMIA Issue Paper는 중견기업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조사기획팀 박양균 팀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 관련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275-2991, Fax) 02-3275-2989, E-mail) ykpark@komia.or.kr

발행인 | 윤봉수 편집인 | 전현철 제작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요 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매우 취약한 구조다. 비즈인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553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99.3%에서 2009년 99.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0.7%에서 0.1%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산업구조는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2011년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법령에는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은 기업을 이분법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견기업 개념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을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 제도 수는 총 32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세제 수가 23건이며, 성장에 따른 차등과세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는 세제 수가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 증가 세제 수

(단위: 개)

| | 중소기업만 지원 | 차 등 과 세 | 합 계 |
|-------------|----------|---------|-----|
| 창 업 | 8 | 0 | 8 |
| 연구인력개발 | 1 | 1 | 2 |
| 투 자 촉 진 | 2 | 2 | 4 |
| 고 용 지 원 | 3 | 0 | 3 |
| 구 조 조 정 | 4 | 0 | 4 |
| 상속 및 증여 | 0 | 3 | 3 |
| 지역균형발전 | 2 | 0 | 2 |
| 그 외(특별세액 등) | 3 | 3 | 6 |
| 총 계 | 23 | 9 | 32 |

* 차등과세에는 기업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도 포함

실제로 기업들은 성장장애 요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조세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사라지고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형확대 포기, 생산기지 해외이전, 사업부문 매각 등 축소지향적 경영계획을 통해 성장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장했다 하더라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에 따른 조세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의 세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연구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일정기간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거나 세제감면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표] 기업 성장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 구 분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
| | | | | 현행 | 개선안(1) | 개선안(2) |
| 창 업 | 과밀억제권역 외 | 소득세 | 50% | 없음 | 25% | 부담완화 기간도입 |
| | 벤처 | 또는 | 50% | 없음 | 25% | |
| | 에너지신기술 | 법인세 | 50% | 없음 | 25% | |
| | 창업기업 (벤처포함) | 등록세 | 면제 | 없음 | 50% | |
| | | 취득세 | 면제 | 없음 | 50% | |
| | | 재산세 | 50% | 없음 | 25% | |
| | 인지세 | | 면제 | 없음 | 50% | |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 5억 공제 7%부과 | 없음 | 3억 공제 5%부과 | |
| 연구 인력개발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 | 7% | 없음 | 3% | |
| 투자촉진 | 투자세액공제 | | 3% | 없음 | 2% | |
| |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 | 손금산입 | 없음 | 손금산입 | |
| 고용지원 |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 | 50% 1천만원한도 | 없음 | 25% 500만원한도 | |
| |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청년: 100% 그 외: 50% | 없음 | 청년: 50% 그 외: 25% | |
| 구조조정 | 중소기업간 통합 |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 없음 | 이월과세 | |
| | | 취득세 | 면제 | 없음 | 50%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 50% | 없음 | 25% | |

1. 문제제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는 매우 취약하며, 오히려 중소기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비즈인포(www.bizinfo.go.kr)에 따르면 553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약 99.3%에서 2009년 99.9%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약 0.7%에서 0.1%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한국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업구조상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대기업 수 또한 적어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표 1] 기업규모에 따른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개사, 명, %)

| | | 1994 | 1999 | 2004 | 2009 |
|---------------|-------|----------------------|----------------------|-----------------------|-----------------------|
| 사업체 수 (개사) | 전 체 | 2,382,571 | 2,758,627 | 2,927,436 | 3,069,400 |
| | 중소기업 | 2,365,318 (99.28) | 2,739,783 (99.32) | 2,922,533 (99.83) | 3,066,484 (99.90) |
| | 대 기 업 | 17,253 (0.72) | 18,844 (0.68) | 4,903 (0.17) | 2,916 (0.10) |
| 종사자 수 (명) | 전 체 | 10,217,910 | 10,425,398 | 11,824,074 | 13,398,497 |
| | 중소기업 | 7,677,089 (75.13) | 8,283,269 (79.45) | 10,210,629 (86.35) | 11,751,022 (87.70) |
| | 대 기 업 | 2,540,821 (24.87) | 2,142,129 (20.55) | 1,613,445 (13.65) | 1,647,475 (12.30) |

주: 2011년 이전에는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됨

- ☐ 이처럼 산업허리인 중견기업군이 취약한 구조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고, 일자리 창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¹⁾
- ☐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2011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지원 및 육성 근거를 마련함
- ☐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 세법은 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성장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따라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졸업하자마자 급격히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해 성장통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황인학,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대기업정책』, 음선필 외,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09

2. 중견기업의 정의 및 범위

- 중견기업이란 쉽게 정의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
 - 다만 금융업과 보험업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 중견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산, 자기자본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업종 규모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난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함
 -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 30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매출액 5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인 기업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표 2] 중견기업의 범위

| 기 준 | 해당업종 | 적용시기 |
|--|---|-------------------------------|
|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 | 제조업 |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
|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 원 초과 | 광업, 건설업, 운수업 | |
|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 300억 원 초과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상시 근로자수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 원 초과 |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
|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 원 초과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
|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이고 매출액 50억 원 초과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 모든 업종 | 해당즉시 |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모든 업종 | 해당즉시 |
|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 모든 업종 | 2012.1.1부터 |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모든 업종 | 2012.1.1부터 |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 모든 업종 | 해당즉시 |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모든 업종 | 2011.1.1부터 |

3.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

(1) 중소기업 관련 조세 지원²⁾

-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 창업, 연구개발, 투자촉진, 고용지원,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음
 -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업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는 포함하지 않음

-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지방세 감면 등이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 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조특 §6조)
 - 사업개시부터 5년 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과세연도부터 적용

-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등 지방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 (조특 §119조)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특 §120조)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 간 재산세 50% 감면 (조특 §121조)
 -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2)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 법인세법, 지방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 국세청, 김필현,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0-13, 중소기업중앙회 『201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2010. 12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인지세 면제 (조특 §116조)

○ 창업자금중소기업 증여세 과세 특례 (조특 §30조의5)

-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 부과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일반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조특 §10조)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 20%) 소득세 또는 법인세공제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연구개발비는 다음 2가지 중 하나 선택세액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 간 발생한 일반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50%(중견기업 40%)
-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25%(중견기업 1~3년차: 15% → 4~5년차: 10% → 6년차 이상: 6%)

$$\text{계산식} : RD\text{지출액} \times 3\% + \frac{RD\text{지출액}}{\text{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times 0.5$$

-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단,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조특 §12조)

□ 중소기업 투자, 정보화지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고용창출투자 등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 중소기업 투자액 3% 공제 (조특 §5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등 투자액의 3%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5조의2)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기업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 등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해 시설 투자금액의 7% 공제 (조특 §24조)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리 시스템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7%(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세액공제 (조특 §26조)
 - 기초공제액은 해당 투자금액의 4%(중견기업 3%) 공제
 - 추가공제액은 해당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2%) 공제
- 고용유지 및 안정 증대 등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1인당 30만원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특 §30조의2)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0조의3)
 - 중소기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1천만 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³⁾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30조의4)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청년 100%, 청년 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3) 소득공제식은 다음과 같음.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0.5

- 중소기업간 통합,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지원, 자가물류시설 양도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 §31조)
 -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특 §120조)
 -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 50% 감면 (조특 §33조의2)
 - 중소기업이 사양산업으로부터 지식정보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46조의4)
 -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3년 균등 분할하여 익금불산입
-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가업승계 시 과세특례
 - 상속 및 증여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의 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 (조특 §101조, 상속 §63조)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15%(중견기업 30%)를 할증과세하며, 50% 이하일 경우 10%(중견기업 20%)를 할증해서 과세함
 - 가업 상속시 상속재산의 세액공제 (상속 §18조)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가업상속 재산의 70% 혹은 2억 원 중 큰 금액 공제
 - 공제한도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100억 원, 15년 이상 15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을 한도로 함

- 고용조건은 상속 후 10년 간 평균 100%(중견기업 120%) 이상 고용유지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조의6)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30억 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10%세율로 증여세 부과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63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4~6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3년 50%세액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 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조특 §64조)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조의8)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에 따라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납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적용우대 (조특 §132조)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7%(중견기업 1~3년차 8%, 4~5년차 9%, 6년차 이상 1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7조)
 - 2014년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기업규모·소재지·업종에 따라 0~30%까지 차등 감면

[표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수도권 | | 비수도권 | |
|-----|--------|-------|-------|-----|
| | 도매업 등* | 그 외 | 도매업 등 | 그 외 |
| 소기업 | 10% | 20% | 10% | 30% |
| 중기업 | 0% | 10%** | 5% | 15% |

주1) *는 도매 및 소매, 의료업을 포함하고, **는 지식기반산업에 한정함

주2) 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 업종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 100억 이상은 소기업에서 제외함

-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특 §7조의2)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사업소득에 대해 10%를 한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법인세법 §64조) 및 접대비 한도액 중소기업 특례 (법인세법 §25조)
-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중견기업 1개월)이내 분납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액은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것으로 함
 - ① 1,800만원(중견·대기업 1,200만원)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12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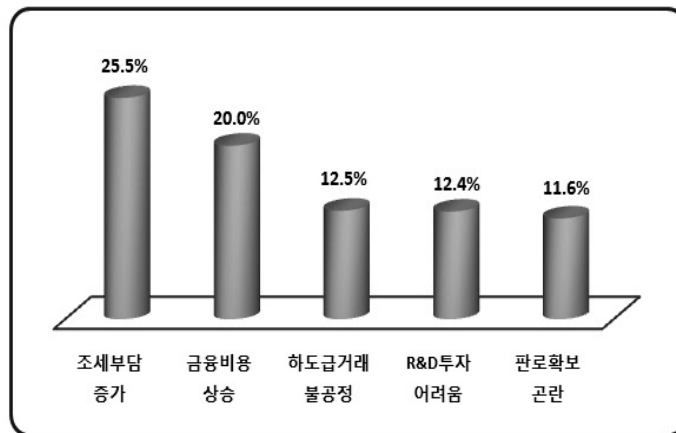
[표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수입금액 | 적용율 |
|-----------------------|---------------------------|
| 100억 원 이하 | 0.2% |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100억 초과금액 × 0.1% |
| 500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00억 초과금액 × 0.03% |

(2)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 현행 조세제도는 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조세부담이 급증하여 기업의 성장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음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은 조세부담 증가로 나타남
 - 기업은행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에 겪는 주된 경영상 애로사항은 조세부담 증가와 금융거래 제약 및 금융비용 상승으로 나타남⁴⁾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상장협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으로 전환 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조세부담으로 나타남⁵⁾

[그림 1] 중견기업 성장시 겪는 주된 애로사항



자료: 조봉현(2009)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 수는 총

4) 조봉현, 『히든챔피언 생성환경과 육성방안』, IBK경제연구소, 제20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2009. 7. 17

5) 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08. 9

32건에 이르고 있음

-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세제는 창업 8건, 연구인력개발 1건, 고용지원 3건, 구조조정 4건, 지역균형발전 2건, 그 외 3건 등 총 23건이 있으며, 중견기업은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등과세로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 수는 연구인력개발 1건, 투자촉진 2건, 상속 및 증여 3건, 그 외 3건 총 9건에 이르고 있음

[표 5]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 증가 세제 수

(단위: 개)

| | 중소기업만 지원 | 차 등 과 세 | 합 계 |
|-------------|----------|---------|-----|
| 창 업 | 8 | 0 | 8 |
| 연구인력개발 | 1 | 1 | 2 |
| 투 자 촉 진 | 2 | 2 | 4 |
| 고 용 지 원 | 3 | 0 | 3 |
| 구 조 조 정 | 4 | 0 | 4 |
| 상속 및 증여 | 0 | 3 | 3 |
| 지역균형발전 | 2 | 0 | 2 |
| 그 외(특별세액 등) | 3 | 3 | 6 |
| 총 계 | 23 | 9 | 32 |

* 차등과세에는 기업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도 포함

-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완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해 5년의 부담완화기간을 두어 최저한세율 증가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 최저한세율: 7%(중소기업)→8%(중견 1~3년)→9%(중견 4~5년)→10%(중견 6년 이상)
 - R&D 세액공제율: 25%(중소기업)→15%(중견 1~3년)→10%(중견 4~5년)→6%(중견 6년 이상)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도 적용대상을 매출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도 공제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부담완화제도가 있지만, 성장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표 6]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조세환경 변화

| 구 분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창업 | 과밀억제권역 외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50% | 없음 |
| | 벤처 | | 50% | 없음 |
| | 에너지신기술 | | 50% | 없음 |
| | 창업중소기업 (벤처포함) | 등록세 | 면제 | 없음 |
| | | 취득세 | 면제 | 없음 |
| | | 재산세 | 50% | 없음 |
| | 인지세 | | 면제 | 없음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 5억 원 공제, 10% 부과 | 없음 | |
| 연구 인력 개발 | ①+②,③ 중 선택 | 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 | 30% | 20% |
| | | ② 당해 발생총액 | 25% | 15% (~3년) 10% (4~5년) 6%限 (6년~) |
| | | ③ 직전 4년 평균 발생액 초과분 | 50% | 40% |
|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 | 7% | 없음 |
| 투자 촉진 | 투자세액공제 | | 3% | 없음 |
| |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 | 손금산입 | 없음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 | 7% | 3%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外) | | 기본 4%, 추가 3% | 기본 3%, 추가 2% |
| 고용 지원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 | 인원× 30만원 | 없음 |
| |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 | 임금삭감액 50% 1천만 원 한도 | 없음 |
|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청년: 100% 청년 외: 50% | 없음 |
| 구 조 조정 | 중소기업간 통합 |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 없음 |
| | | 취득세 | 면제 | 없음 |
|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 사업전환(外) 50% 무역조정기업 50% | 없음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 | 익금불산입 | 없음 | |
| 상속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 | 10% (지분율 50% 이하) | 20% |

| 구 분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및 증여 | 주식 할증평가 | | 15% (지분율 50% 초과) | 30% |
| | 가업승계 | 증여세과세특례 | 5억 원 공제, 10%부과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 | 좌동 *매출 1,500억 이하 |
| | | 상속공제 | ①, ② 중 큰 금액 ① 70%(10년 100억, 15년 150억, 20년 300억) ② 2억 원 | 좌동 *매출 1,500억 이하 |
| 지역 균형 발전 | 수도권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 100% (~6년) 50% (7~9년) | 없음 |
|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 50% | 없음 |
|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 | | 익금불산입 | 없음 |
| 최저한세율 | | | 7% | 8% (1~3년) 9% (4~5년) 10% (6년 ~) |
| 특별세액감면 | | | <소기업> 도매업 등: 10% 그 외: 20%(內), 30%(外) <중기업> 도매업 등: 5%(外) 지식기반산업(內): 10% 도매업 등 외(外): 15% | 없음 |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 | | 10% 원 | 없음 |
| 법인세 분납기한연장 | | | 2개월 | 1개월 |
| 법인세 접대비한도액 | | | ①+② ① 1800만원×해당사업연도 월수/12 ②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 이하: 0.2% -100억 초과~500억 이하: 0.1% -500억 초과: 0.03% | 좌동 단, ① 1,200만원 |

* (內)(外)는 수도권 안과 밖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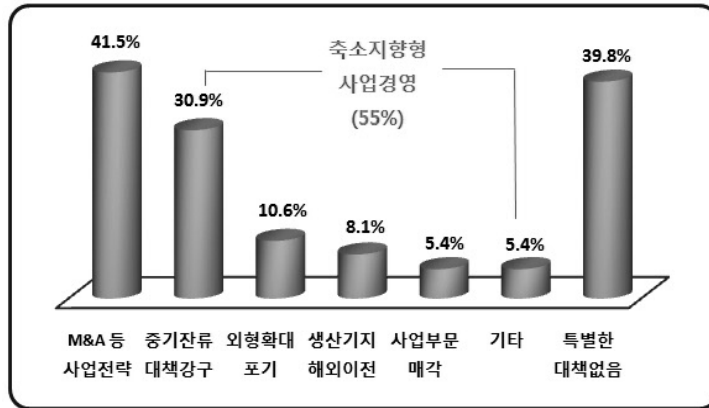
- 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증가로 인해 축소지향적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⁶⁾ 실제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⁷⁾
- IBK경제연구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졸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55%이상이 중소기업 잔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외형확대 포기, 생산기지 해외 이전,

6) 조봉현, 『히든챔피언 생성환경과 육성방안』, IBK경제연구소, 제20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2009. 7. 17

7) IBK경제연구소, 『위기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10. 5. 10

사업부문 매각, 중기잔류 대책 강구 등 축소지향적 경영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중소기업 졸업에 대한 대비책



자료: 조봉현(2009)

- 실제로 2003년 중견기업에서 2008년에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은 404개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중소·중견기업 성장현황

(단위: 개사)

| | | 2008 | | |
|------|------|--------|-------|--------|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합 계 |
| 2003 | 중소기업 | 57,601 | 533 | 58,134 |
| | 중견기업 | 404 | 606 | 1,010 |
| | 합 계 | 58,005 | 1,139 | 59,144 |

주1)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 59,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주2) IBK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 중견기업 984개사, 대기업 26개사, 2008년에 402개사, 2개사로 분류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있어 대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해 재가공함.

원자료 출처는 IBK경제연구소, 『위기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10. 5. 10

4. 개선방안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함
 - 현행 조세제도는 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조세부담이 급증하여 기업의 성장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음
 - 기업들은 성장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조세부담증가를 제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 분야에 대해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창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경제발전에 기여
 - 기술개발, 연구개발, 투자 등은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구조조정은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그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에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거나 조세감면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의 부담완화기간 도입
 - 창업,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 분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
 - 현재 중견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과 R&D 세액공제에 대해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 세제 감면 등 세제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음
 - 창업(과밀억제권 외,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포함)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신설
 - 중견기업(관계회사 포함)이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25%) 감면, 취득세·등록세(50%) 감면 및 재산세(25%) 감면 신설
 - * 현행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음
 -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감면제도 신설
 - 중견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기술취득금액의 3%) 신설
 - * 현행 중소기업은 기술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2%) 신설
 - * 현행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중견기업의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신설
 - * 현행 중소기업은 손금산입
 - 고용유지 및 창출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중견기업의 경우 임금삭감액의 25%(5백만원 한도) 소득에서 공제
 - * 현행 중소기업은 50%(1천만 원 한도)
 - 고용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청년 50%, 청년 외 25%) 공제
 - * 현행 중소기업은 청년 100%, 청년 외 50%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세제 지원 제도 신설
- 사업전환 중견기업 및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세액(25%) 감면
 - * 현행 중소기업은 50% 감면
- 중견기업 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50%) 감면
 - * 현행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표 8] 기업 성장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 구 분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
| | | | | 현행 | 개선안(1) | 개선안(2) |
| 창 업 | 파밀억제권역 외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50% | 없음 | 25% | 부담완화 기간 도입 |
| | 벤처 | | 50% | 없음 | 25% | |
| | 에너지신기술 | | 50% | 없음 | 25% | |
| | 창업기업 (벤처포함) | 등록세 | 면제 | 없음 | 50% | |
| | | 취득세 | 면제 | 없음 | 50% | |
| | | 재산세 | 50% | 없음 | 25% | |
| | 인지세 | | 면제 | 없음 | 50% | |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 5억 공제 7% 부과 | 없음 | 3억 공제 5% 부과 | |
| 연 구 인력개발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 | 7% | 없음 | 3% | 부담완화 기간 도입 |
| 투자촉진 | 투자세액공제 | | 3% | 없음 | 2% | |
| |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 | 손금산입 | 없음 | 손금산입 | |
| 고용지원 |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 | 50% 1천만원한도 | 없음 | 25% 500만원 한도 | |
| |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청년: 100% 그 외: 50% | 없음 | 청년: 50% 그 외: 25% | |
| 구조조정 | 중소기업간 통합 |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 없음 | 이월과세 | 부담완화 기간 도입 |
| | | 취득세 | 면제 | 없음 | 50%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 50% | 없음 | 25% | |

참 고 문 헌

국세청(www.nts.go.kr)

비즈인포(www.bizinfo.go.kr)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김필현,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정책 연구 2010-13

조봉현, “히든챔피언 생성환경과 육성방안”, IBK경제연구소, 제20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2009. 7. 17

중소기업중앙회, “201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2010. 12

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08. 9

황인학,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대기업정책”, 음선필 외,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09

IBK경제연구소, “위기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10. 5. 10



사단
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OREA MEDIUM INDUSTRIES ASSOCIATION

서울 마포구 도화2동 37번지 진도빌딩 11층
Tel: 02)3275-2985~8 Fax: 02)3275-2989
www.komia.or.kr